

남정집 : 행정학박사, EBS 교육방송강사, 서울신문명강사 소개, 시험출제위원, 부산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 충북대 고시반 특강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교무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승진교수, 에듀윌 전임, 이그잼고시학원 EBS행정사 강의

## 행정학

### 1. 개 요

2013년 국가직 7급 문제는 전년도에 비하여 수험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쉽게 느껴졌으리라 사료된다. 시험과목 개편이 있다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쉽게 출제한 경향이 있다.

출제경향으로는

- (1) 기본서에 있는 기본이론을 통한 추론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 (2) 단순암기문제가 다수 출제 출제되었다.
- (3) 기본서에 언급된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4) 출제위원들이 출제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박근혜정부가 중시하는 창조경제 즉,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 (5) 그간 예측가능한 문제들, 즉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 (6) 보너스형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으며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특히, 제4편 인사행정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 2. 출제경향 및 단위별 출제 분포도

참행정학 기본서와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정리, 마무리특강으로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루틴화된 룰에 의하여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은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지문과 법률과 연계된 이론에서 출제비중이 높았다.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 또는 행정학회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되는 분야, 또는 행정학회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 단위별        | 출제내용                                       | 출제경향                     |
|------------|--------------------------------------------|--------------------------|
| 1편. 행정학 총설 | 시장실패원인                                     | 기출문제에서 출제(5%)            |
| 2편. 정책학    | 배분정책, 정책의제, 킹던모형                           | 보편적인 학자 묻는 문제 (15%)      |
| 3편. 행정조직론  | 수직적 조정기제, 전문화원리, 변혁적 리더십이론, 정보화책임관, 위원회유형, |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25%)         |
| 4편. 인사행정론  | 직위분류제, 교육훈련, 부패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징계제도       | 보편화된 문제로써 기출문제에서출제(25%)  |
| 5편. 재무행정론  |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top-down budgeting), 결산제도     | 전년도 기출문제와 국회법에서 출제 (10%) |
| 6편. 행정환류론  | 행정통제과정                                     | 기존 5급기출문제에서 출제 (5%)      |

|           |            |                                    |
|-----------|------------|------------------------------------|
| 7편.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법, 지방세 |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고 있는 보편화된 기출문제에서 출제(15%) |
|-----------|------------|------------------------------------|

### 3. 수험 대책

누차 강조하듯이 행정학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학문이다, 고로 정부정책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본교과내용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틈틈이 신문을 구독하면 자연스레 감각이 생길거라 사료된다.

사회과학의 시작은 명확한 용어정리부터 라는 말이 진리이다

고로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기본서에 충실하며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분야는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보편적인 학자는 단순암기하고 이론은 이해를 통한 추론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 4. 효율적 학습방법

- (1) 행정학의 기본은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 (2)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 (3) 기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 (4)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5) 최근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 눈높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 (7) 에듀윌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학습하면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사료됩니다.
- (8)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3.6.22일 시행 인 책형

|                     |
|---------------------|
| 동영상은 에듀윌에서 촬영해놓았습니다 |
|---------------------|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X-비효율성
- ④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③]

[출제의도] 시장실패와 비교하기

| 구 분 | 시장실패                                                                                                                                                                                                                                                                                               | 정부실패                                                                                                                                                                                                                                                                                                                                                                |
|-----|----------------------------------------------------------------------------------------------------------------------------------------------------------------------------------------------------------------------------------------------------------------------------------------------------|---------------------------------------------------------------------------------------------------------------------------------------------------------------------------------------------------------------------------------------------------------------------------------------------------------------------------------------------------------------------|
| 원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재의 존재나 공급부족</li> <li>• 외부효과(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li> <li>• 독점의 존재, 불완전경쟁, 완비하지 못한 시장, 비용체감, 수익의 증가, 사회적 비용증가</li> <li>•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빈부격차심화</li> <li>•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li> <li>• 인플레이션 초래</li> <li>• 시장의 불완전성</li> <li>•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이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의 내부성,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사적목표설정</li> <li>•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효과 확산)</li> <li>• 비용과 수익의 분리, 양출제입</li> <li>• X-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li> <li>•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li> <li>• 정부의 독점서비스 공급, 비용체증, 공기업증가</li> <li>• 스태그플레이션</li> <li>• 높은 시간 할인율, 지대추구이론, 포획이론</li> <li>• 비민주적인 행정관행(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관료의 도덕적 해이)</li> </ul> |
|     |                                                                                                                                                                                                                                                                                                    |                                                                                                                                                                                                                                                                                                                                                                     |

2. 경제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
-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정답 ①] [출제의도] 정책유형 분류하기

②는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정책이다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정답 ④] ④는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4. 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 (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 (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정답 ①] ①은 관련성이 없다.

<참고>흐름 · 창모형

① 개념 : Kingdon이 제창한 흐름·창모형(Streams and Windows Model)은 의사결정에 관한 쓰레기통모형을 다소 변형시켜 서로 연관이 없으면서도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흐름인 문제, 정치, 정책흐름을 현실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참여자와 정책의제 내지 정책대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세 가지 흐름이 합류되면 창이 열리고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② 세 가지 흐름

㉠ 문제흐름 : 공중이나 정책결정자는 특정사회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문제에 대한 관심집중은 일상적인 모니터링,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건의 발생, 현행 사업계획의 환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정치흐름 : 해결되어야 할 쟁점이나 문제들을 가리키는 정부의제가 형성되며 국민감정,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정부기관의 역할관계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고위정부직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기관, 이익집단, 일반 여론 등이 주요참여자가 되며, 이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 정책흐름 :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각종 대안인 결정의제가 형성된다. 이 흐름에서는 특정정책변동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직업공무원, 학자, 연구자, 이익집단들인 정책창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③ 세 흐름의 합류와 정책의 창

㉠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계기 : 정권교체, 의회의 변동, 국민감정의 변화, 시급한 공공문제의 대두, 돌발적인 큰 사건의 발생 등이다.

정치흐름과 관련되는 정부의제의 재구성을 초래하는 창이 열리면 전적으로 문제흐름이나 정치흐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정책대안인 결정의제가 재구성되는 데는 반드시 세 흐름이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 정책의 창이 닫히는 경우 : 정부행동 유도불능, 사건의 퇴조, 고위직의 인사이동, 대안의 부재 등이다.

㉢ 정책의 창이 아주 짧은 일정기간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은 발빠른 행동을 요하게 된다. 엔서니 다운즈는 재정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을 실감하기 전에만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정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답 ③] ①은 독립규제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 ②는 헌법기구, 독립기구로서 독립규제위원회, ④는 조정위원회에 유사하다.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

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한다.

## <참고>징계제도

### (1) 개념

징계제도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 신분을 변경·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징계의 종류

①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현력 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② 경징계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2개월간 승급 정지

#### ③ 중징계

㉢ 정직(停職)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급이 제한된다.

㉣ 강등(降等)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며 이와함께 보수승급도 18개월동안 제한<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12. 31 시행)>

㉤ 해임(解任)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지급한다.

㉥ 파면(罷免) : 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4을, 5년 이상은 1/2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지급한다.

##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④]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참고>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판례**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개정 94·6·28]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신설 94·6·28]

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신설 94·6·28, 2000·2·16]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91·5·31, 2002.3.7. 2003.2.4]

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삭제 [2003.02.04.]

⑧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보장                |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출제의도]실적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양분된다

고로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유사하고 직위분류제는 실적제와 유사하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약하므로 ㄴ은 관련이 없다.

<참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 구분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직무중심 |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인간중심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신분사회)                      |
| 채용국가   | 미국·캐나다·필리핀, 프에르토리코              | 영국·독일·일본, 불란서, 한국               |
| 관리기법   | 과학적 관리법                         | 인간관계론                           |
| 시험·채용  | 합리성                             | 비합리성                            |
| 자질     | 전문행정가 양성                        | 일반행정가 양성                        |
| 보수정책   |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형평성, 합리적 보수제도)   |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
| 인사배치   | 비신축성(횡적 의사소통곤란)                 | 신축성(횡적 의사소통용이)                  |
| 행정계획   |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
| 교육훈련   | 전문지식 강조                         | 일반교양강조                          |
| 조정·협조  | 곤란(할거주의 초래)                     | 용이                              |
| 충원형    | 개방형                             | 폐쇄형                             |
| 신분보장   | 약함                              | 강함                              |
| 직업공무원제 | 확립곤란                            | 확립 용이                           |
| 조직구    | 연계성 높음                          | 연계성 부족                          |

|                  |        |        |
|------------------|--------|--------|
| 조와의<br>관계        |        |        |
| 인사<br>운용의<br>탄력성 | 낮음     | 높음     |
| 공직경<br>직성        | 낮음     | 높음     |
| 창의력,<br>능력발<br>전 | 불리     | 유리     |
| 도입요<br>건         | 대규모 조직 | 소규모 조직 |
| 적용계<br>층         | 하위계층   | 상위계층   |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
|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
| ③ 행정협의회     |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
|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

[정답 ④] 지방자치법을 묻는 지문이다.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
|---------------------------------------------------------------------------------------------------------------------------------------------------------------------------|
|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④] ㄱ은 지방소비세로 보통세, ㄷ은 지방소득세로 보통세이다.

<참고> 지방세 분법<2011. 1. 1 시행>

- (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
- (2)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통폐합·간소화 됨
- (3)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 (4)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이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특별시·광역시세이다.
- (5)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6) 지방세 분법

|         |                                  |                                                  |                                                               |                          |
|---------|----------------------------------|--------------------------------------------------|---------------------------------------------------------------|--------------------------|
|         | 도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br>세                                                  | 자치<br>구세                 |
| 지방<br>세 | 취득세,<br>보통면허세,<br>통폐지세,<br>지방소비세 | 주민세,<br>재산세,<br>자동차세,<br>담배소비<br>세,<br>지방소득<br>세 | 취득세, 주민<br>세,<br>자동차세, 담<br>배소비세,<br>레저세, 지방<br>소비세,<br>지방소득세 | 등록<br>면허<br>세<br>재산<br>세 |
|         | 목지방교육세,<br>적지역자원시<br>설세          |                                                  | 지방교육세,<br>지역자원시설<br>세                                         |                          |
| 국<br>세  | 내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br>합부동산세                      |                                                               |                          |
|         | 세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br>인지세, 증권거래세                  |                                                               |                          |
|         | 목적<br>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br>세                      |                                                               |                          |
|         | 관세                               |                                                  |                                                               |                          |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 ② 규칙과 계획
- ③ 수직정보시스템
-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정답 ④] ④는 수평적 조정기제이다. 2013년 서울시전환특채문제이다.

<참고> 조정 기제

조정(coordination)이란 조직 내 부서간, 계층간의 협력의 질을 의미한다.

㉠ 수직연결(vertical linkages)은 조직의 상하간 활동을 조정하는 연결 장치이다.

㉠ 계층제(hierarchical referral)란 명령, 체계이다.

㉠ 규칙과 계획(rules and plans)이란 반복적인 문제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상위 계층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없이도 부하들을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계층 직위의 추가(add position to hierarchy)란 수직적 계층에 직위를 추가함으로써 상관의 통솔범위를 줄이고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수직정보시스템(vertical information system)이란 수직 연계의 역량을 제고한다.

㉡ 수평연결(horizontal linkages)은 조직부서간 수평적인 조정과 의사소통을 말한다.

㉡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란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 직접 접촉(direct contact)이란 조직문제에 관계된 구성원들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다.

㉡ 임시 작업단(task force)이란 여러 부서간의 연결은 임시 작업단과 같은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수평적 조정을 담당할 정규 직위를 두는 방식이다.

㉡ 사업팀(project teams)이란 가장 강력한 수평 연결 장치로써 영구적인 사업단으로, 사업추

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들 간에 장기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
|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
|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
|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ㄷ → ㄹ
- ③ ㄴ → ㄷ → ㄱ → ㄹ
-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②] 5급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 <참고> 행정통제의 절차

뉴맨(Newman)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략지점의 기준설정(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 ① 적시성 : 통제를 필요로 하는 편차의 발생을 신속히 발견하여야 한다.
- ② 경제성 : 통제를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균형성 : 행정이 전체적으로 균형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 ④ 포괄성 : 조직 상위계층의 통제일수록 조직 전체 활동을 집약할 수 있도록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 ⑤ 사회적 가치성 :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3) 성과에 대한 검사와 보고(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이미 설정된 계획과 목표 및 기준에 비추어 실제의 성과를 검사 내지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4) 시정조치(통제주체의 시정조치)

본질적인 통제는 시정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실제의 성과를 계획과 목표 및 기준에 비추어 검사하고 평가해 본 결과 그 간에 편차가 생겼다면, 이미 집행된 행동을 시정하든가 장래에는 그러한 행동이 계획목표와 기준에 맞게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답 ①] ①번은 전문가적 직무(professional job)는 수평적인 전문화는 높을 수 있지만

수직적인 전문화가 낮은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 직무설계

- ㉠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의 분업 정도를 전문화(specialization)라 한다.
- ㉡ 전문화는 수평적 측면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직적 측면에서 직무의 깊이(depth)를 결정한다.
- ㉢ 기아자동차의 자동차조립공정, 삼성전자의 TV생산과 같은 대량생산제조업체의 경우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의 정도가 높은 조직이다.
- ㉣ 지나친 전문화는 개인 수준에서 직무의 단조로움과 낮은 중요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조감, 피로를 가져와 인간소외, 이직을 증가를 초래한다.
- ㉤ 조직 수준에서 지나친 전문화는 직무간, 부서간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
- ㉥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는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가 높다.
- ㉦ 조직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관리직무(managerial job)는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 ㉧ 일선 관리직무(lowest-level managerial job)는 수평적인 전문화의 정도는 낮고, 수직적인 전문화의 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직 직무(professional job)는 수평적인 전문화는 높을 수 있지만 수직적인 전문화가 낮은 것이 효율적이다.

● 직무전문화와 과제분류(Mintzberg,1979) ●

| 구 분     |   | 수평적 전문화     |             |
|---------|---|-------------|-------------|
|         |   | 고           | 저           |
| 수직적 전문화 | 고 |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 | 일선관리업무      |
|         | 저 | 숙련직무        | 고위 전략적 관리직무 |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답 ①]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비교

| 구 분    | 거래적(교환)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
|--------|----------------|------------------|
| 목 표    | 현실지향성          | 카리스마형 지도자        |
| 시 간    | 단기적 시각, 가시적 보상 | 장기적 시각, 잠재적 보상   |
| 변 화    | 안정지향성          | 변화지향성            |
| 동기부여전략 | 외재적 보상         | 내재적 보상           |
| 행동표준   | 표준화            | 지적인 자극유도         |
| 문제해결   | Knowhow를 줌.    | Knowhow를 찾으려 함.  |
| 초 점    | 하급관리자          | 최고관리자            |
| 관리전략   | 경제적 보상, 사회적 관계 | 비전의 공유를 통한 조직몰입도 |
| 이 념    | 능률성            | 적응성              |
| 조직구조   | 기계적 관료제        | 연성조직             |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정답 ④] [출제의도] 우발적 부패와 비교하기

<참고>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

G. E. Caiden이 말하는 제도적 부패는 행정 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체제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라고도 한다.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 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부패와 대비되는 우발적 부패는 사건 자체의 연속성이 없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부패를 말한다. 예로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상직렬 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 ②] ①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이 가입, ③은 6급이하 기능직, 별정직이 가입, ④는 공립학교 교원은 전교조, 전교총에 가입하므로 가입금지

<개정법률>

특정직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상직렬 공무원
- ㉡ 소방정, 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지방자치법을 묻는 지문이다.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정답 ③] [출제의도]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분야를 묻는 지문이다. ③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참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개정 2013.3.23>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

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제 10012호([전자정부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②] 보너스 문제로서 하향식(top-down)방식이다.

<참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 (top-down)

(1) 도입배경

- ①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연도별 재정규모와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점검·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2004년 예산편성부터 도입되었으며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운영하고 있다.
- ② 지출한도가 최고관리층에 의해 설정되면 부서장들은 지출한도 내에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하는 것과 같이 하향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획예산제도(PPBS)를 거부하는 비합리적 예산제도로 거시적 예산결정(macro budgeting)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과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의 제정으로 인한 예산 심의 과정의 변화에 기인한다. 하향식 예산과정의 대표적 형태는 목표예산(TBB ; target basebudgeting)과 지출대(支出帶) 예산(envelope budgeting)이라고 할 수 있다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향”한다.

<참고> 집단적 문제해결

| 기 법 | 전통적 델파이                              | 정책델파이                                 | 브레인 스토밍                   | 명목집단기법                                 |
|-----|--------------------------------------|---------------------------------------|---------------------------|----------------------------------------|
| 특 성 | 동질적인 분야의 전문가, 익명성유지, 대면 토론(회합)하지 않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흥미있는 자, 대면토론, 공개성 | 전문가, 비전문가 참여, 대면회합, 비 판금지 | 전문가, 대면회합하나 구두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지 않음, 표결중시 |